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의견서 번호 : 24-26)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건 명	중앙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 집행 가능여부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개요

- 사업명 : 20**년 △△형 ○○○○○ 조성
- 주관/ 전담 : ◇◇◇부(A과) / ○○○○○ 협회
- 추진체계 : □□시 등 *개(기관)사 컨소시엄 구성
- 사업기간 : 20**. 1*. ~ 20**. 1*.

○ 추진 경위

- □□시는 ◇◇◇부에서 주관하는 “20**년 △△형 ○○○○○ 조성”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해 ☆사 등 *개 기관과 컨소사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차례 재검토 및 반려를 받았음
- 컨소시엄은 ◇◇부 실사계획 승인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자문수당, 여비 등 약 *억원)가 이미 발생(비용 부담주체 미협의 상태)하여 비용보전이 필요하고 지연된 사업기간 만회를 위해 실시설계비(약**억원) 집행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시에서 추진 중인 20**년 △△형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행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시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안임

3. 검토의견

- 본 건은 □□시(컨소시엄)가 ‘20**년 △△형 ○○○○○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인건비, 자문수당 등을 ◎◎◎◎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이 편성된 이후 소급하여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사용승인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안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한 경우 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 법령 규정과 정부합동감사 현장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 제4항에서 교부결정 통지일 전 예외적인 지방보조금 교부 요건 중 하나인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의 의미는 관련 예산이 편성된 이후부터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까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관련예산이 편성되기 이전까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시로 교부되었다고 하여도 현재 ◎◎◎◎부의 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조금 사용의 사전절차를 이행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사전 사용 및 사후 교부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